

광주시, SRF 중재 포스코이앤씨 압박

국감서 부당성 알리고…600억 손배소 진행

국회와 ‘과도 증액금지 중재법 개정’도 추진

광주시가 포스코이앤씨 측이 제기한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2100억원 규모의 중재에 맞서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는 중재 테이블과 별도로 국정감사와 손해배상 소송, 법 개정까지 총동원해 포스코이앤씨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서울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있었던 강기정 시장과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간 면담을 계기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잠정 연기하고, 시작된 실무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상사중재원도 2개월 간 중단됐던 8차 중재 심리를 오는 27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활용해 포스코이앤씨 측의 부당 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산재 사망사고 관련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국정감사를 SRF 관련 포스코이앤씨의 부당성을 알릴 기회로 보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해 한노위원

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포스코이앤씨 측 SRF 시설의 성능 미달과 잇단 가동 중지로 쓰레기를 소각대신 매립하게 되면서 발생한 매립장 수명이 5년 단축되는 등 6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배소에 나서는 한편 현재 다툼을 중재하고 있는 중재원에도 이를 근거로 포스코 측에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판정 절차 중인 중재 판정부에는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와 ‘운영비용 및 사용료에 관한 78억원’을 두고 다투기로 합의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도중 청구 범위를 모든 손해로 확대해 ‘2100억원 배상’을 요구했고, 중재 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이 중재 돌입 합의 범

위를 벗어나 판정부가 ‘권한 없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판정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법원에 ‘중재 판정부 권한심사’를 신청해 끝까지 다투기로 했다.

광주시는 직접적인 대응 외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현재 중재 절차는 법원의 재판을 대신해 빠른 분쟁 해결이 장점이지만, 이번처럼 중재 도중 과도하게 청구액을 증액하는 경우 단선제로 진행되는 특성상 공공기관이 일방적인 피해를 떠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박군택(광주 광산갑) 의원과 협의해 공공기관 중재의 경우 ‘최초 신청 금액의 과도하게 초과하는 증액은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담은 중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李 대통령, 국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내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 추석 연휴 직후 민생·정책 행보에 다시 속도를 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소통의 장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즉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국민 패널을 모신다”며 “정책의 효과, 아쉬운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시내에서 열리며, 참가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비쿠폰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이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이틀간 네이버폼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뒤, 13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AI는 광주’서 계속

AI 2단계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에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엔비디아 2H100 2000장을 확보해 지난해 873곳의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 인공지능 제품 실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지역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성장의 필수 기반시설로 정부는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치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반기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를 2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돼 지분 구조를 공공지분 51%, 국산 AI반도체 도입의 무 등 공모요건을 조정해 3차 공모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제출된 기업 등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유치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진행한 시민 서명운동에 지난 2일 기준 온라인 1만3578명·오프라인 11만1055명 등 총 12만463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컨퍼런스과 연계해 15~17일까지 AI혁신기술 전시회인 ‘AI 테크플러스(TECH+) 2025’도 열린다. 이곳에서는 AI 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드론,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이 인공지능 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지사, 산업·농정 현안 해결 ‘광폭 행보’

산업부·농식품부 잇단 면담…석유화학·RE100 등 적극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산업·농정 분야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지역 산업 전환과 농업재해 지원 등 전남의 주요 정책과제를 직접 건의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일 김경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집중 건의했다. 그는 광양지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위기지역 교부세 가산 일몰

연장(2025→2027년), 여수국가산단의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양국가산단 ‘수소환원제철 설비전환’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여수·광양산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범사업과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비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전기요금 50% 할인,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세제혜택 등 특례를 반영하고, 전남 서남권을 국내 1호 RE100 시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광양만권을 ‘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을 완성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남권 조선업 클러스터에 ‘AI 자율 운영 스마트아트’ 구축도 건의했다.

오후에는 송미령 장관을 만나 ‘솔라시도 에너지 미래도시’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간척지 태양광 설치 허용과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을 요청했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피해 면적이 전년 대비 2.8배 증가한 가운데, 김 지사는 피해 벼 전량 매입과 복구비 지원을 함께 요구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가을축제, 안전하게”…도, 먹거리 안전망 총력

남도국제미식박람회·해남 LPG에 식음료안전센터 운영

가을철 대규모 축제와 국제행사가 잇따라 전남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남도가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한남도 축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9~11월) 도내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행사는 총 62개로, 9월 17개, 10월 33개, 11월 12개가 예정돼 있다.

가을은 기온이 높고 음식 조리·보관이 실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9~11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연평균 24건으로 전체 식중독 발생의 40%를 차지했다. 대부분 인파가 몰리는 축제장이나 야외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계절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가을 축제기간 동안 집중적인 식음료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오는 10월 26일까지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10월 16~19일 ‘해남 LPG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는 식음료안전센터를 운영해 상시 점검 체제를 유지한다.

미식산업박람회 현장에는 식품위생감시원 163명이 투입돼 식음료시설 37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각 시·군 보건소, 식품의약품, 축제 주관 부서 간 협업체제를 강화해 행사 전후로 점검을 확대하고, 방문객이 몰리는 주요 행사장에는 임시 위생 상담소를 설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광주·전남 국감’서 계속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국립광주과학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광주기상청을 시작으로,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홍수통제소·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대상으로 잇따라 감사를 벌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에너지 분야까지

관장하게 된 만큼, 23일에는 한국전력과 전력 자회사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27일 광주고용노동청 감사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지체자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여수·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시작으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2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27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순으로 국감을 이어간다.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영남대학교의
학부·학과·전공
정보를
제공합니다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oS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 구름다리 옆

062) **376-5425**

NAVER 나코스